도의회 광장

2021 08 제7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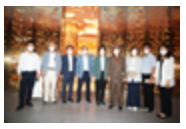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398회 임시회

04/07 주요 이슈

08 생생 의정활동

10 함께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가을, 기다림 여름의 끝자락에 서서 하늘을 보니 푸르기만 하다. 자연은 그렇게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로막힌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의 문이 불어오는 가을바람과 함께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비양도를 바라보며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민생안정 추경예산안 심의

제398회 임시회 개회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제주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 임시회가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13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주로 다루는 임시회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8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3천237억 원이 증가한 6조5천54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확정된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천714억 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1천551억 원을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구제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제주도교육청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기정예산 1조2천256억 원보다 1천3억 원 증가한 1조3천259억 원 규모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따라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오는 9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게 된다.

개회사

"코로나 피해지원 추경예산안, 추석 명절 이전 신속 집행해야"

제398회 임시회 개회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과 민생안정에 쓰여질 예산인만큼 이제 곧 다가올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8월 26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천237억 원이 늘어난 6조5천547억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백신 방역, 고용·민생안정 등에 편성되었지만 추경 기조에 맞는지 시급한 민생예산이 누락되거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상임위별로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꼼꼼한 추경 심사를 당부했다.

이어 "제주도는 민선 7기 업무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자동면직된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를 재지명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면서, "정무부지사를 재임명하는 만큼 재임기간 성과평가와 함께 지금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합한 후보인지 그 적격 여부를 철저히 재검증해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 제2공항 갈등 해소, 4·3 배보상 등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가운데 최근 곶자왈 보전관리 방안 수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과제가 많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주민반발과 민원에 대해 잠재우기식 일시적인 대처로는 안 된다. 행정의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도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도민 동의나 주민 설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로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원만한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에 도정 역량을 모아 달라."고 역설했다.

좌남수 의장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위해 도의회를 찾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자대행에게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당면과제가 많다."며, "잠재우기 식 일시적인 대처가 아닌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기강을 강력히 바로잡아 권한대행 체제의 조기 안정화 해야 한다"면서 "제주도 방역망과 의료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현안 대응에도 도정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추경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지난 12일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주도정은 제주형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추경 편성 등 공공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끝내고 빠른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5분 발언

"제2공항 대안 정석비행장 반대"

강연호 부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사진·서귀포시 표선면·국민의힘) 부의장은 8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제주 국회의원들이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제2공항 대안론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석비행장 대안에 대해 정석비행장의 소재지 의원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며, "제주 제2공항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연호 의원은 "정석비행장은 2018년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과 결과에서 10개 후보지 중 최하위를 기록해 탈락한 후보지다."라며, "한라산 중턱 표고 350m에 윈드시어와 안개, 눈 등 항공기술적인 안전성과 편의성, 환경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아 탈락한 정석비행장을 들먹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재보완서) 반려 결정 이후 제2공항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혔다."라며,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인데도 지난 6년 동안 방기하다 지금 와서 불쑥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꺼내 정책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새로운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제2공항과 같은 핵심인프라 입지 결정이 정치인들의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또 주민 수용성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했는데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말하기 전에 가시리와 표선면민의 의견을 단 한 차례라도 물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석비행장 대안론으로 제2공항 찬성·반대단체와 성산읍·표선면 사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정석비행장 대안론으로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길 촉구하며, 또 거론한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보건의료정책, 도정 우선순위 당겨야"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우선순위 정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사진·연동갑·더불어민주당)은 8월 26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이 아닌 코로나19와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제주지역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8월 들어서만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과 간호인력 부족 등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양영식 위원장은 "바이러스 전파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유행이 오고 가기를 반복해도 우리들의 일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우선순위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저수준인 보건예산 규모를 전국평균 이상으로 편성해 2022년부터는 보다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산남·북 의료격차 해소, 고령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을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 조직의 정비와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위기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기대응 조직이 아닌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 정책 담당부서와 보건소 조직의 확대 및 인력충원을 건의했다.

4·3특별위원회

4·3특위, 3차 4·3유적지 현장 답사

관음사 및 이덕구 산전 답사 통해 4·3 의미 상기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7월 28일 3차 4·3유적지 현장 답사를 위해 관음사 및 이덕구 산전을 방문했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현장 답사를 통해 4·3 유적의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및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연동을)은 "관음사(제주시 아라동 소재)는 4·3사건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의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장소로, 관음사 주변 5만여 평의 밀림지대에는 무장대와 토벌대의 초소들, 군 숙영지, 피난민들의 주거지 등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시대적 상황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 자산인 만큼 훼손되지 않도록 복원과 보존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덕구 산전을 방문한 강철남 위원장은 "이덕구 산전은 1948년 말부터 1949년 초까지 수백여 명의 피난민들이 난리를 피해 숨어들어와 곳곳에 거주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그들이 하산한 이후 무장대 사령부인 이덕구 부대가 잠시 주둔하였다고 하여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4·3유적지를 잘 관리하여 후대에 4·3의 가치를 전승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5월부터 10월까지 4·3유적지 현장 답사를 진행하며, 4차 방문은 9월 16일 시오름주둔소와 중문성당, 백조일손묘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회생 방점 둔 활동 약속

의회 차원 코로나19 정책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도록 최종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제4차 대유행 등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민생경제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감안한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의회 차원의 정책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구성되었으며, 당초 1년의 기간을 목표로 활동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대유행으로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나타나는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2022년 1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간 특위는 첫 행보인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특별성명서」 채택을 시작으로,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상설화 근거 마련,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용어 변경, 골프장 세제 혜택 축소, 학교급식 업체 지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감염병 예방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총 9회 개최해, 임업, 관광, 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예방, 제주공동체, 골프산업, 식품기부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담론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와 관련 국회 방문 등 적극적 활동으로 허가가 유보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한 비대면 소비 플랫폼(배달앱) 구축 제언,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도입, 지자체 근로감독관 이양,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촉구 등의 정책제언 또한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 특수에 따른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노력에 소극적인 골프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지하수 사용 골프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도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했으며, 취약계층 대상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한 특위-JDC-사회복지협의회 간 협약을 계기로 릴레이 쌀 기부가 이어져 기부받은 쌀은 총 13,314kg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연장된 6개월 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의 길」 도서 발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정책토론회 지속 개최,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여, 2022년 1월 최종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방역 및 민생경제의 정책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더욱 시급한 시기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된다" 면서 "향후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질 민생경제의 회생에 방점을 둔 특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7월 29일 고은실 부위원장의 주재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10차 정책토론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좌담회는 지난 4월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이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정책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평화·통일 도민 공감대 확산

강민숙 위원장, 김대진 부위원장 선임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최종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을 위한 정책발굴과 대안 제시,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는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에 강민숙(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원, 부위원장에 김대진(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의원을 선출했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민숙 의원은 "그동안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입지를 다져왔으며, 비타민C 외교라 불리는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등 평화실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상징지역으로서 선제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특위구성을 통해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의회,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토론회 개최, 도민참여운동 개최지원 등 앞으로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진 부위원장 또한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1.3.9.)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비정치적·비군사적 분야의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등 타시도 광역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 운영되는 만큼 상호 교류협력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활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8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주요이슈

제15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기관부문 '종합대상'

이상봉 위원장 '최고위원장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좌남수 의장)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기관부문 '종합대상'을, 개인부문에서는 이상봉 의원이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1대 후반기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통해 소외된 약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현안 해소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인정되어 '종합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과 의정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활동 전개와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선도적·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도 긍정평가를 얻었다.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하게 된 이상봉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1년 넘게 이끌어 89건의 시정 및 권고 조치를 도출하는 등 "외지자본 중심"에서 "도민 상생 중심"으로 개발사업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으며, 숙의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조례, 주민투표 조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개정 등 주민자치 실현을 본위에 둔 일관성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한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조례 의결 관련 시설공단 Q&A 제작·배포, 새로운 '특별자치' 2단계 완성 기반 마련을 위한 읍면동 자치 강화, 행정구역 개편, 자치분권 현안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 의회 주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TF 운영 단초 마련,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민주권 실현 등에 대한 의정활동 능력을 인정받았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회조직 활동의 총체적 성과와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심사해 주는 상으로 올해 15회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부문에 최고위원장상 박원철 의원과 최고의원상 김경미, 문종태 의원이 수상하였다.

"방역기관 직원 여러분, 힘내세요"

공항 워크스루 선별소 등 찾아 간식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에서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주 도내 방역기관 10여 개소를 방문해 간식(과일도시락 1,200개)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좌남수 의장은 우선 8월 23일 공항 워크스루 선별소를 시작으로 예방접종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등 방역기관을 방문해 최근 집단감염 발생 등에 따른 코로나 진단검사 폭증 및 확진자 역학조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좌남수 의장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관련 기관단체, 전세버스사업조합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의장실에서 8월 12일 제주도내 건설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사진 왼쪽)를 가진데 이어 13일에는 제주 전세버스 사업조합 임원진과 간담회(사진 오른쪽)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데 따른 해당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모색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등 다양한 방안 제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례동) 공동주관으로 지역 내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7월 26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오창헌 하원마을회장, 강상기 직전 하원마을회장,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 양인정 인재개발원장, 이도경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전담TF 구성의 필요성 △연구용역의 필요성, △교육기관 유치방안 △중장기계획 마련 등이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철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구)탐라대학교 부지특성 및 진행상황, △유휴지 활용사례,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대안,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서귀포의 균형발전과 나아가 제주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방안 마련에 모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본 좌담회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이경용 의원은 "좌담회를 통해 (구)탐라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도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정책은 무엇?

2021년 연속기획 청년정담회 개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노형 을, 더불어민주당)는 7월 23일 도민카페 열린소통공간에서 2021년 연속기획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묻다' 제11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정담회(靑年情談會)는 2015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준비 당시부터 제주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획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청년당사자 논의구조로, 현재까지 총 11회에 이르고 있다.

이번 2021년 연속기획 청년정담회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묻다'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삶과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의회 차원에서 청년 당사자와의 정책토론 등의 공론 기회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도의회와 청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된 다양한 의제 및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제주청년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주제선정을 위해 사전에 제주청년센터는 구글폼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해 주요 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제11회 청년정담회는 '청년참여와 활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좌장을 맡을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정책수요자와 간담회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한 만큼 제주청년의 시급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 면서, "청년정담회를 3회 이상으로 연속기획한 이유는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전달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한 결과까지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에서 벗어나 도정의 모든 정책에, 제주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제주의 미래가 나아진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열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 개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제주 하천에 시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의 하천은 대다수가 건천이고 화산성 암반을 지반으로 하고 있어 도외 지역 하천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고유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도외지역의 하천 정비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제주 하천의 고유 생태계와 경관 훼손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정책토론회는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점검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12일 해안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및 관련부서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안어린이집은 2011년 5월 31일 지정된 곳으로 주변도로 총 130m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보행자도로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이용하여 등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오영희 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마을안길 확인 및 요청사항을 듣고 우선적으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 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설 출입구에서 반경 300m 도로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최대 반경 100m 이내 일부 도로만 지정되어 있어서 반경 200m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도시위원회

'세계평화의 섬' 인식제고 위한 '평화대공원사업' 방향은?

알뜨르, 송악산 일대 평화벨트 조성 정책토론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서는 위성곤 국회의원실, 의원연구모임인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의원 오영희)과 공동으로 8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벨트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화대공원 사업의 대상인 알뜨르비행장은 1932~1933년 상모리 6개 마을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수용하여 6만평 규모의 불시착륙장으로 처음 건설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관리되다가 현재 대정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국방부(공군)와 임대계약을 맺고 매년 소작료를 내며 농사를 짓고 있다.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평화대공원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국방부와 토지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였고, 대통령 공약임에도 후순위 사업으로 밀리는 등 지역에서의 알뜨르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없었다.

현재 위성곤 국회의원은 평화대공원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및 사용 허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주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송악산과 알뜨르의 연관 관계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던 양병우 의원은 "알뜨르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수용 후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고향이자 사용돼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며, 바로 주변 송악산 일대까지 일제 전적 시설의 집합체로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여 평화대공원사업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도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많은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알뜨르와 송악산을 연계한 평화 벨트 조성 제안'을 계기로 평화의 섬으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 기획한 강성의 위원장은 "송악산 일대의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갈등이 평화의 섬을 해치는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어,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넓은 폭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여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적극적 관리 시행 근거 마련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환경도시안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근거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도로나 길의 폭이 2m 이하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진입 불가지역과 도로나 길의 폭이 3m 이상인 구간에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상습 주차 및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하여 출동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환경 조성 및 관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은 없으나 진입 곤란지역은 17개소로 조사되어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소방에서만 조사되어 관리하고 있었으나, 본 조례를 통해서 진입 불가지역 및 곤란지역을 도로 및 주정차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출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성의 위원장은 "본 조례를 통해서 도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도로 폭은 충분하나 노상 주차 등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계획 수립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마을사랑방,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찾는다

제주문화누리포럼 제10차 현장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강민숙 의원)이 7월 22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현장투어'를 실시했다.

제주에는 현재 총 45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20개소인 45%는 운영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독서증진과 더불어 생활문화 향상에 있으며 공동체문화를 강화시키는데 있지만 전반적으로 운영비 미지원에 따른 문제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현실적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접근방법 면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설문대어린이도서관(연동)과 호꼼슬로작은도서관(일도이동)을 방문해 애로점을 들으며 의견을 나눴다.

현장 간담회에는 문화누리 포럼 강민숙 대표의원, 정민구 부대표의원, 강철남 의원, 김희현 의원, 김장영 의원과 도 문화정책과, 제주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에서 동행했다.

문화누리포럼 강민숙 대표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기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공간으로서 미지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듣는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곶자왈 숲의 산림치유 효과 모색 및 활용

지속가능발전연구회 토론회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대표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7월 22일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주관 '곶자왈 숲의 산림치유 효과 모색 및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제주에서 치유 숲, 해양, 농촌, 오름, 올렛길 등의 다양한 자원들은 현대인들의 새로운 치유통로의 길이며, 이 길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그동안 곶자왈과 숲이 인간에게 주는 치유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에서 휴양과 힐링,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더불어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지금 시점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행정,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주산림치유연구소 신방식 이사장의 '건강을 위한 제주도 곶자왈 숲의 산림치유 효과' 주제발표에 이어 제주향토문화원 김원순 숲해설사, 제주YMCA 송규진 사무총장, 한라산둘레길 김서영 팀장, 제주관광공사 양필수 그룹장,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허정환 소장, 제주도 관광정책과 변영근 과장이 참석해 토론이 이뤄졌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재해예방 사업장, 1차산업 분야 치유시설 방문

함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7월 20일 제397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 일정으로 여름철 재해예방 사업장 및 1차산업 분야 코로나 블루 치유 시설을 방문했다.

현장방문은 여름철 갈수록 대형화되는 가뭄 및 홍수 등의 예방 시설인 함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1차산업 분야의 치유기능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 운영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산림치유 시설을 선정·방문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함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1년간 612억 8천만 원의 국비를 들여 구좌읍 송당공구와 조천읍 함덕공구에 저수지 2개소(저수량 920천㎥)와 저류지 2개소(718천㎥), 양수장 1개소, 관정 1개소, 용수관로 12조(27.39㎞) 등의 공정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중에 있으며, 올해 말 전 공정이 완료되면 구좌읍과 조천읍 지역 421가구, 농경지 800ha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며, 농경지 이용율도 기존 108%에서 110.6%로 2.7% 상승하고, 21억 7,300만 원의 경제 수익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길호 위원장은 "함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여름철 가뭄 및 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재난재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주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보강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업과 해양부문의 자연치유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과 삶 재단 설립 관련 간담회 열어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이번 임시회(제398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 안건에 대한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8월 20일 농수축경제위원장실에서 개최했다.

특히, 지난 7월에 제출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여부에 대해 의원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일치된 안이 마련되지 않아 9월 중, 2차 간담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세부 추진계획,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 등을 토대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일자리재단 설립 필요 여부와 역할, 일자리사업 기관간 업무 조정, 기존 일자리사업 평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따른 도 재정 부담, 일자리 정책 로드맵 등에 대해 의원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현길호 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인한 4단계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에 대해서는 상정여부 등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경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국제학교 IB 교육연수 공교육 상생협력 모색

JDC 찾아 간담회 실시

부공남 교육위원장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대림 이사장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IB 교육연수 및 방학중 영어캠프 확대를 통한 공교육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20일 JDC 이사장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부공남 위원장은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IB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IB 교육을 공교육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중 NLCS와 BHA는 오랜기간 IB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좋은 성과도 내고 있어 제주의 경우 이러한 국제학교의 IB 교육 역량을 활용하면 더 없이 공교육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방학중 영어캠프를 중장기로 운영해 방학중 해외 어학연수에 대한 수요에 대해 부응함을 물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이사장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와 공교육간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지원을 지원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며,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2명 교원이 국제학교에서 공교육IB 교사 연수를 받았으며, 특히 2021년도에는 22명의 교원이 국제학교로 파견된 바 있어 앞으로도 제주 공교육에 IB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이사장은 "현행 4박 5일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학중 영어캠프에 대해서도 국제학교와 제주 초등학교와의 방학 일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중장기의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방안은?

정민구 부의장, 강민숙 의원 공동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정민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8월 10일 공동으로 '도내 특수학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발생한 특수학교 학교폭력 사안을 계기로 도내 3개교의 특수학교 관계자와 교육청의 관계 부서들이 함께 자리하여 광범위하게 특수학교에 적합한 교육안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핵심 주제는 통학버스 내 안전실무원의 충원과 학교 내 CCTV 설치가 가장 큰 화두가 되었는데, 장애학생을 위한 통학버스의 경우 장시간 통학에서 오는 여러 의사표현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버스 내의 안전실무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버승 운행 안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민숙 의원은 "타 시도 특수학교나 도내 중고등학교의 경우 복도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내 특수학교의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민구 부의장은 "예전에 CCTV 설치 초기에 제기되었던 잠재적 범죄자 취급, 인권침해 논란들로 반발이 컸었지만 CCTV 자체를 열람하려면 별도의 절차와 권한을 가진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보호장치로 설치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도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강하다는 점에서 우선 일부 학교에만 시범으로 운영해보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CCTV는 아무나 열람할 수 없고 특별한 목적이나 권한을 분명히 설정하면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 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어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 입장에서도 오해의 소지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안전을 위하여 학교 꾸성원의 신뢰를 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조례소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사진·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13일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를 감면해 0.25%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감면 예상금액은 1억 4,4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입국금지 및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가 경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제주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1년 더 연장 및 유지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함께함으로써 극복 가능한 바,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등의 발굴을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김경학 의원

김경학 의원(사진·구좌읍·우도면·더불어민주당)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구교육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체계적인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학생 발달 단계별 및 교직원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선도학교 운영, 교원 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공무원 연수기관이나 학회 또는 대학 등에 연수 위탁 등에 관한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구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 신·증설 및 폐교 등 인구구조 및 학력인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실효성있는 학교 인구교육을 지원하도록 여러 형태의 전문적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경학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학교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 적정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명존중, 평등의식, 가족친화적 가치관 등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인구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도정에서 시행하는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도정과 학교 간의 인구교육이 연계되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예결특위위원장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일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은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운영 전반의 건전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의 공립과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의 책무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책무를 명시함은 물론 사립의 회계운영과 인사운영, 재산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법인 경영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에 준하는 연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박호형 위원장 "도내 10개에 학교법인에 16개교의 사립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교육의 한 축으로서 학교 운영 전반의 건전성과 책무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 조례안

강시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사진·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사업추진 규정(안 제6조), 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8조), 교육규칙 규정(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강시백 교육의원은 "2021년 3월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21세기 교육환경을 구축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심에는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

강철남 4·3특별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사진·제주시 연동 을·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한복교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한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친밀도를 높이고 한복이 지닌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알게 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규정(안 제4조), 의견수렴 규정(안 제5조), 실태조사 규정(안 제6조), 지원 규정(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8조), 시행규칙 규정(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지금까지 제주도내 학교들이 교복을 선정하는데 한복교복을 배제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한복은 한민족이 품고 있는 얼과 정신이 전통문화로 발현되는 상징물이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영 교육의원

김장영 의원(사진·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 범위를 제주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도내 교육시설의 사용범위를 도외의 교육기관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김장영 교육의원은 "제주가 전지훈련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육지부 학교운동선수들이 도내 교육시설에서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도내 학교운동선수들 역시 도외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훈련받기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

정민구 부의장

정민구 부의장(사진·제주시 삼도 1·2동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작업 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가 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련 정책 개발,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운영하여 캠페인과 홍보활동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민구 부의장 "학교 급식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안전사고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끼임사고 등 예견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2017년 학교급식소가 기관구내식당업을 적용받게 되면서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받게 되었고, 지난해 법이 전부개정되어 적용대상 직종이 학교급식실, 시설물 관리 업무, 청소 및 통학 업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제주 드림타워 시설운영 현황 청취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제7차 연찬회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 (대표 오영희 의원·비례·국민의 힘)은 7월 26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현장을 방문해 호텔과 식음료 시설 등 세부시설을 비롯해 최근 개장해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 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대응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희 대표 의원은 "제주시 도심지역내의 카지노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개장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았다."며,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되면서 관광객 안전과 시설내 방역사항 점검을 비롯해 복합리조트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와 도민에게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은 오영희 대표 의원(비례·국민의 힘)을 비롯해 양병우 부대표(대정읍·무소속), 고태순(아라동·더불어민주당), 이경용(서홍·대륜동·국민의 힘), 김창식(교육위·제주시 서부), 강연호(표선면·국민의 힘) 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영진(비례·민생당)의원도 연찬회에 같이 참석했다.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현장 목소리 들어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가 주최하고, 강성균 의원(애월읍·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간담회가 8월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래 WTO 농업협상 등 국내·외 농업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른 강점과 약점 등을 파악하여 제주농업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듣고,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과 향후 활용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현길호 위원장(조천읍·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전환 등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주 농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속에 제주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균 의원은 "우리 제주의 농업은 영세성과 유통구조 등 도서 지역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기후변화와 소비시장 변화로 인해 현재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미래를 위해 제주 농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먹거리 지원 시너지 효과

김경미 의원, 정책간담회 실시

친환경 급식 확대를 통한 안전먹거리의 확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8월 12일 도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가 주최하고, 김경미 의원실이 주관하여 '친환경 먹거리 확대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현길호 위원장은 "오늘 정책간담회는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해 아동 복지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도 "지난 5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친환경 먹거리 확대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개최되는 오늘 간담회에서 관련 조례개정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공교육과 복지의 공적 돌봄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친환경 먹거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고,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먹거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기한 제주어 ❽

오망오망ᄒᆞ다

(동사) 올망졸망하다

<예문>

그 시간은, 오망오망ᄒᆞᆫ 손지덜광 식솔덜 ᄇᆞ레멍 눈ᄀᆞ득 웃이는 아방광 식솔덜 ᄆᆞ음이 ᄆᆞᆫ 펜안ᄒᆞ여지는 어느 ᄀᆞ슬, ᄎᆞ근ᄒᆞᆫ 빗주제도 멧 번 삐여뎅기고 선선ᄒᆞᆫ ᄇᆞ름이 빙완을 ᄎᆞᆽ앙 들어오곡 ᄒᆞ는 초ᄌᆞ냑 ᄀᆞ리라십주.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①'에 실린 제줏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손지덜광 식솔덜 : 손자들과 식구들
ᄇᆞ레멍 : 보면서
웃이는 : 웃는
ᄀᆞ슬 : 가을
ᄎᆞ근ᄒᆞ다 : 차분하다
빗주제 : 잠깐 내리는 비
삐여뎅기고 : 뿌려다니고
선선ᄒᆞ다 : 아주 서늘하다
ᄀᆞ리라십주 : 무렵이었지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42일 · 정례회 2회/47일 · 임시회 8회/95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55일 예결위 22일 공휴일 37일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3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 원 선임 ·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5.(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95회 임시회	5.28.(금) ~ 6.9.(수)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8월 ~ 9월	제398회 임시회	8.26.(목) ~9.7.(화)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11.3.(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12.15.(수) (3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8일 예결위 9일 공휴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12.23.(목)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8일

생활 & 법령뉴스 Q&A

Q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계약은 승낙거절 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 계약확인 시 A씨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사고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과 책임 면책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해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Q&A

청렴실천 당당대한민국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돼요

Q **교수와 학생 간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1/n로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갹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예) 학생 4명에 교수님 1명이 정기적으로 5회 식사를 한다고 하면, 10만원씩 4번을 학생들 회비로 지불하고, 10만원 1번을 교수님이 식사 값으로 지불

A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지도교수님의 모임에서 각자내기를 하는 등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은 후 시일이 지나 상대방에게 동일한 액수로 접대를 하는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공제 상계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 공제 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순번제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을 각자내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원 기고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추경

감기처럼 잠시 스쳐 지날 것 같은 코로나19가 2년째 제주를 비롯하여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딱히 그림에서 선택한다면, 아마도 세계적인 네덜란드 화가 뭉크의 절규를 꼽을 것이다. 이 작품은 독자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 작품을 만들어 왔다.

특히 붉은 노을의 변화에 다리 위에서 S자 모양으로 휘어진 몸에 입과 눈을 크게 뜬 채 두 볼에 손을 올리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사람의 모습은 두려운 마음을 절실히 담은 고통, 우울감. 놀람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표현력만으로도 우린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요동치는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절규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발생에서 오는 블루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경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래도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허용하지 않은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번째 정부 추경이 진행되었다. 제주 역시 이에 따라 이달 말이면 추경이 시작된다. 이번 추경은 방역대응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문화예술과 관광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상권과 농어민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소득이 급감한 도민들에게 추가지원을 위한 것이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은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난날의 경제활성화는 단순 산업적 경영의 측면에서만 접근해왔다. 코로나 대응 추경이었던 지난해에도 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한 회복예산인 문화예술과 스포츠예산을 모두 감액 하여 단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었다. 이 결과는 오히려 경제위축과 코로나 블랙을 유도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본예산 편성부터 사회적 경제구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과 같은 분야까지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미력하나마 품격있는 예술 향유와 함께 문화산업, 소상공인들까지 부가적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위기 대응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여기에는 또 하나의 조치를 요구해본다. 추경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재적소의 집행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견인하여 뭉크의 절규로 더 이상 크로싱되지 않도록 말이다.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기고

건강과 치유, 웰니스 관광 육성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한다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노라면 문득 우리의 옛이야기 속,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를 둔 어머니의 심정이 이랬을까 싶다. 맑은 날에는 우산 장수 아들의 장사가 안될까 봐 걱정, 비가 오는 날에는 짚신 장수 아들의 장사가 안될까 봐 노심초사했던 어머니의 심정이 요즘 우리 제주 관광인들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것 같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650여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대비 9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자칫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걱정된다. 하지만, 제주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제주를 찾아주는 관광객이 많은 것은 불행 속의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이 팬데믹이 끝난다는 사실이고, 코로나19로 부득이 갇혀 살아야 했던 세계인들은 과감하게 관광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팬데믹에 막혀 갈 수 없었던 새로운 곳을 찾아 보고, 느끼며, 즐기기 위해 투자하고 지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관광의 미래는 이 팬데믹 속에서 누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제주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을 위해 건강과 치유, 웰니스 관광 육성으로 '일상의 회복'을 도모해 드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양하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서귀포 치유의 숲 웰니스 멍때리기 행사, 도내 웰니스관광지 4개 분야 – 자연·숲치유, 힐링·명상, 뷰티·스파, 만남·즐김치유 – 총 11개소를 선정하여 팬데믹 스트레스에 지친 이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웰니스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 상품 품질을 개선하고 교육, 컨설팅 등 사업체 수용태세 강화로 제주의 건강한 여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를 둔 어머니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자. "맑은 날에는 짚신이 잘 팔려 짚신 장수 아들이 좋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려 우산 장수 아들이 좋으니 맑은 날도 좋고 흐린 날도 좋으니 모두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생각은 180도 달라진다.

제주관광도 당장의 고민을 버리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때다. 건강과 치유, 웰니스 관광에 제주의 미래가 있다.

김현아 주무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추석 전 벌초 "안전사고 예방"

추석을 앞두고 벌초 시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벌쏘임 사고는 59건으로 8월과 9월에만 37명이 발생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24일 현재 49명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추석명절을 전후해 벌초작업 중 뱀 물림(2019년 54건, 2020년 39건)과 예초기 안전사고(2019년 5건, 2020년 26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8월과 9월은 벌의 산란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벌초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 주의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벌침을 제거하며, 물로 씻거나 얼음찜질을 하고, 어지럽고 숨이 차며 근육경련 등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119에서 신고해 병원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뱀에 물렸을 때는 심장보다 낮게 해 고정하고 물린 곳에서 5~10cm 위쪽을 탄력붕대나 끈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고, 뱀에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은 입에 상처가 있거나 충치가 있는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예초기 작업 시에는 목이 긴 안전화, 보안경, 장갑,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장비 조작법을 숙지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칼날에 다쳤을 경우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소독약을 바른 후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 병원에서 신속히 치료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력 8월 초하루(9월 7일)를 전후한 벌초철을 앞둬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다음달 20일 자정까지 1개월간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족 벌초(공설묘지 포함)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적용해 4인까지만 허용된다. 문중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에 한해서는 8명까지 허용한다.

아무쪼록 거리두기 4단계 방역대책을 공유하며, 안전수칙을 지켜 즐거운 추석명절을 맞이하여야 하겠다.

정용택 소방장 /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4·3지방공휴일 전국 달력표기 반영

김용범 운영위원장, 국회 중앙절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이 국회와 중앙절충을 통해 지방공휴일인 '4·3희생자추념일'의 전국 달력 공식 표기를 이끌어냄으로써, 4·3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사진·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더불어민주당)은 8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4·3지방공휴일이 전국 달력 표기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月曆要項)'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월력요항(月曆要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달력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24절기,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달력에 표기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하는 근거자료다.

국회와 중앙절충을 통해 이번 4·3지방공휴일 달력 표기를 이끌어낸 김용범 위원장은 "4·3문제 해결에 있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세대에 역사적 교훈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3지방공휴일을 통해 1년 365일 중 4월 3일 단 하루만큼은 모든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4·3의 역사를 되새기고 희생자를 추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방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3특위 양동규 사진전 '터' 참석

강철남 위원장, 김창식 의원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과 김창식 의원은 7월 22일 포지션민제주(제주시 삼도2동 소재)에서 열린 양동규 작가 사진전 '터'에 참석해 첫 제주 전시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양동규 작가는 1978년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변화하는 제주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를 시각화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섬의 하루〉, 〈잼다큐 강정〉 등을 연출, 제작한 바 있으며, 2019년 〈양동규 기획초대전 '섬, 썸'〉, 〈4·3미술제 '경야'〉, 〈4·3 기억투쟁예술 타임라인전〉, 2017년 〈키워드 한국미술 2017: 광장예술-횃불에서 촛불로〉, 2015년 〈강정 기록전 '적, 저 바다를 보아라'〉 등 전시를 기획하고 참여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양동규 작가를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말하고 제주의 가치를 발굴하는 젊은 예술인"으로 소개하면서, "4·3의 전국화, 세계화, 그리고 미래세대 전승이라는 과제에 대해 양 작가와 같은 젊은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방대학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강성민 위원장,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 개정 추진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사진·이도2동 을·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시대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27일 발의했다.

제주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대학특성화 학과·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및 기숙사 확충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9조에 제17항을 신설하여,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및 원격수업 확대 추세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위원장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관련 조례 제14호(제안 및 공동발의 포함)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 캠퍼스도 몇 번 가보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대학생들의 처지를 정말 안타깝게 느끼며, 양질의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인력 보강, 프로그램 운용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에 보다 기여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현장 업무협의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현장 의정활동으로 8월 17일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업무협의를 개최했다.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업무협의는 문예회관 사거리에 소재한 버스정류장이 도보 이용자와 버스 승하차 이용자의 동선이 중복되어 혼잡하고, 정류장 내 환기시설 및 주변 그늘 부족으로 여름철 온도 상승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코로나 충격 가장 컸다…제주 경제성장률 -7.5%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 부진이 이어지며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25일 '코로나19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현안 보고서에 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제주경제는 -7.5% 성장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부진했다고 밝혔다.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는 서비스산업의 생산 증가율과 도·소매 판매 증가율이 각각 -10.4%와 -26.9%를 기록해 전체 경기 침체를 불러온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지역 지방세는 5.4%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에서 울산(1.7%) 다음으로 낮았다. 이 기간 전국 평균의 지방세 증가율은 15.8%다.

보고서는 제주의 지방세 부진 원인 역시 관광산업의 침체로 관련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주도의 지방교부세는 전년(2019년)보다 오히려 13.1% 감소했다. 감소 폭을 보면 부산(14.9%), 대구(14.2%), 대전(13.4%), 강원(13.4%)에 이어 5번째로 컸다.

반면 경기(8.7%)와 세종(8.0%), 인천(5.4%) 등은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의 국고보조금 증가율도 21.1%로, 전국 평균(37.1%)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이전 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증가율 역시 제주가 2.5%로, 전국 평균(27.2%)에 턱없이 낮았다.

제주도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자금이 차질 없이 배분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